

## 한반도 정세와 대북관련 국민 인식의 변화 분석

김명호  
통일문제연구원

### <요약문>

2018년 들어 남한과 북한 사이는 그동안의 단절된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시작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남한, 북한, 미국의 3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의하여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버렸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김정일은 핵 보유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따라서 한·미의 모든 안보 전략은 이 명백한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되 유일한 지렛대인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통일관련 인식도, 북핵 문제, 남북경협 문제, 북한 인권 및 이산가족 문제

## I. 서 론

2018년 들어 남한과 북한 사이는 그동안의 단절된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시작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리고 남한, 북한, 미국의 3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한반도에 확실한 평화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와 남북관계는 2018년에 비하여 경색되는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더구나 북미 정상은 2019년 5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미국의 북한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의문 채택 없이 회담을 마쳤다.

이에 대한 불만인지, 북한은 지난 2019년 8월 16일의 미사일 발사 이후 8일 만인 8월 24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방사포 등의 도발 행위는 지난 5월 이후 아홉 번째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8월 24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조선일보」, 2019/8/24). 그러나 2019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군사 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 2019/9/26).

더구나 북한은 최근 잇달아 남측 당국을 정조준하여 도를 넘는 막말성 발언을 쏟아낸 것은 남북관계가 2018년 4·27 판문점회담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4·27 판문점회담과 9·19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모두 무효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박경준, 2019).

그리고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9월 29일 한국 정부의 국방력 강화 조치가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어긋난다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미사일 도발을 10차례나 했는데도 "북한은 작년 9·19 군사 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하는 것과 대비된다(「조선일보」, 2019/9/29).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2019)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으며,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대북 관련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통일문제연구원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지역주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문제 의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및 국제정세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다.

## II.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기존의 연구

### 1. 남북 정상회담의 경과

그동안 남북 정상 간에 있었던 정상회담의 경과를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뒤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표 1> 남북 정상회담의 경과

회 차	항 목	시 기	합 의 문	장 소
불발	김영삼-김일성	1994년 7월 25일		평양 예정
제1차	김대중-김정일	2000년 6월 13~15일	6·15 공동선언	평양
제2차	노무현-김정일	2007년 10월 2~4일	10·4 선언	평양, 백화원초대소
제3차	문재인-김정은	2018년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	판문점 ‘평화의 집’
제4차	문재인-김정은	2018년 5월 16일		판문점 ‘통일각’
제5차	문재인-김정은	2018년 9월 18~20일	평양 공동선언	평양

\* 출처 : 김명호. (2018).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도 분석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원 『통일연구』, 창간호, p.4.

#### 1)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가

- ①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평가 : 2000년 6·15 공동선언 합의로 남북 교류협력 확대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 ②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평가 : 2007년 10·4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후 동력을 상실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이용화·이해정, 2018, pp.1-12).

#### 2) 제3, 4, 5차 남북 정상회담의 평가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18년 만인 2018년 4월 27일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날 남북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9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연이어 개최된 제4, 5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간 신뢰 회복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이용화·이해정, 2018, pp.1-12).

## 2. 북미 정상회담의 경과

북미 정상회담은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루어졌다. 그동안의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북미 정상회담의 경과

회차	항 목	시 기	합의문	장 소
불발	트럼프-김정은			
제1차	트럼프-김정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2차	트럼프-김정은	2019년 2월 27~28일	결렬	베트남 하노이
제3차	트럼프-김정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 1) 제1차 북미 정상회담

#### (1) 개요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회담이었다.

#### (2) 결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① 완전한 비핵화, ② 평화체제 보장, ③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④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인 12일 북한은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에 대한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논평을 통해 "제2차 북미수뇌회담이 파탄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데일리한국」, 2019/6/12).

### 2) 제2차 북미 정상회담

#### (1) 개요

2019년 2월 27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에 제동을 걸었다.

#### ① 북한이 미국에 취해야 할 조치 :

-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연변 핵시설' 폐쇄
-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등의 영구적 폐기
- 북한의 비핵화 세부계획 제시

#### ② 미국이 북한에게 취해야 할 조치 :

- 북한의 경제변영을 위한 조치
-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조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미 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내세우는 반면, 북한은 이미 핵 무력을 완성한 상태여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강영두·지성림, 2018, pp.26-27). 사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선제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핵무기를 인정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하겠다.

## (2) 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 및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대가로 유엔 제재의 상당 부분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었다. 미국은 또 영변 핵 시설 외에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등 북한의 무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핵·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할 것을 문서 형태로 약속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맞받았다. 미국은 북한의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와 신고 리스트를 요구한 반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영구 중단 선언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양측이 접점을 찾기에는 입장 차가 너무 컸다고 할 수 있다(강진욱, 2019).

따라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은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에 대한 북미 양국의 현격한 인식 차이에 있었다.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유엔 대북제재 5개 전부/일부와 영변/영변+α의 등가성에 대한 북미 양국의 현격한 인식 차이이고, 근원적으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한 일괄 타결의 충돌이라고 하겠다(양문수, 2019, p.69).

무엇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인하여 미국보다 북한이 회의 결과에 대하여 당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밝혔지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각인되어 다시 협상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협조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양문수, 2019, p.70). 다행히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 3) 제3차 북미 정상회담

### (1) 개요

한국전쟁 정전 66년 만에 전쟁의 당사자인 남북미 3국 정상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남북미 회담까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북미 정상이 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 지역 ‘자유집’으로 오가는 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여,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장면도 연출되었다. 두 정상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고,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던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강진욱, 2019).

### (2) 결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실행을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불가침 약속’을 비롯한 일련의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북미 정상 간에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실무협상 재개 문제를 연계, 협상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핵심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체제 안전 보장의 대표적 조치인 '불가침'을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되었다(강진욱, 2019).

그러나 7개월 만에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은 결렬되었다. 태영호(2019) 전 북한공사는 협상이 열리기 직전 이미 결렬을 예상하면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비핵화 조건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제재 대열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얻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북한 내부를 알고 있는 태영호 공사의 예상은 다시 한 번 적중했다(「조선일보」, 2019/10/7).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와 나는 서로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며, 김 위원장과의 친분도 강조했다. 지난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나온 이 같은 발언은 아직도 김 위원장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이고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조선일보」, 2019/10/22).

따라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 3. 유엔 총회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2019)은 UN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자신의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그 원칙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 ① 전쟁불용의 원칙 :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이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
- ②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칙 :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으며,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
- ③ 공동번영의 원칙 :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사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며, 단지 시간을 끌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계획하였다는 속내를 드러내었다.

#### 4. 선행 연구

노기호(2018, p.333)는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에 대하여 국제법상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과 같은 이른바 분단국가(분단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양 당사자가 여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법적 관계를 부여하고 있다면 역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지지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국내외적으로 팽배하고 있다.

고유환(2018, pp.125-141)은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선언’에 입각해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검토해 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의 압박정책’,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핵 병진정책’ 사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위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켜 비핵평화프로세스(‘문재인 프로세스’)를 본격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아지고 대외신인도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이 여러 정황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이 연구는 문 대통령과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또한, 권율·김미림(2018, pp.1-19)에 의하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표명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베트남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적 안정하에 순조롭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와 국교정상화 과정을 통해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 북한도 베트남처럼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세부계획과 기존 시설의 폐기 및 폐쇄를 한다면,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한에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민정훈(2019, pp.383-403)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별에 대하여 비핵화를 위해 남북한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CVID를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의 의사를 감안하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추상적인 합의는 향후 비핵화에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말하는 동맹국은 문 대통령의 의사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의 CVID 합의를 존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공주(2019, pp.209-231)는 우리나라와 근본적 체제가 다른 북한이므로, 합의 자체가 우리의 헌법에서 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으며, 남·북한의 통일은 대등통일보다는 대한민국으로의 흡수통일이 더 현실적이고 안정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의 통일은 대한민국에 의한 합의적 흡수통일이 가장 현안이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임수호(2019, p.73)는 북측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이 제2차 북미회담 결렬의 핵심요인이라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전망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으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4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결별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회담 결별의 핵심요인이라면 비관도 낙관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 Ⅲ. 통일관련 인식도에 대한 실증분석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머지않아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작스런 분위기에 우리는 통일에 대하여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공주, 2019, pp.209-231).

따라서 국내 및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1. 연구방법 및 기초자료 분석

##### 1) 연구방법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통일문제연구원이 2018년과 2019년에 실시한 강원도 소재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① 응답자의 인적 특성, ② 북한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 ③ 통일 정책 문제, ④ 남북통일의 전망, ⑤ 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2) 실증적 분석 결과

###### (1) 응답자의 기초자료 분석

(사)통일문제연구원이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는 2018년 9월과 2019년 6월에 실시되었다. 2018년에는 745부의 설문지가, 2019년에는 837부의 설문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2018년에는 ‘남자’ 376명(52.9%), ‘여자’ 335명(47.1%)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① ‘20세 이하’ 175명(24.6%), ② ‘21-30세’ 384명(54.0%), ③ ‘31-40세’ 49명(6.9%), ④ ‘41-50세’ 42명(5.9%), ⑤ ‘51-60세’ 46명(6.5%), ⑥ ‘61세 이상’ 15명(2.1%)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9년에는 ‘남자’ 547명(65.4%), ‘여자’ 290명(34.6%)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① ‘20세 이하’ 177명(21.1%), ② ‘21-30세’ 484명(57.8%), ③ ‘31-40세’ 55명(6.6%), ④ ‘41-50세’ 47명(5.6%), ⑤ ‘51-60세’ 60명(7.2%), ⑥ ‘61세 이상’ 13명(1.7%)으로 나타났다.

&lt;표 4&gt; 응답자의 인적 특성

항 목	세부 항목	2018년		2019년	
		인원수	비 율	인원수	비 율
성 별	남 자	376명	52.9%	547명	65.4%
	여 자	335명	47.1%	290명	34.6%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나 이	20세 이하	175명	24.6%	177명	21.1%
	21-30세	384명	54.0%	484명	57.8%
	31-40세	49명	6.9%	55명	6.6%
	41-50세	42명	5.9%	47명	5.6%
	51-60세	46명	6.5%	60명	7.2%
	61세 이상	15명	2.1%	13명	1.7%
직 업	대학 1학년	215명	30.2%	212명	25.3%
	대학 2학년	133명	18.7%	128명	15.3%
	대학 3학년	131명	18.4%	144명	17.2%
	대학 4학년	70명	9.8%	151명	18.0%
	일반인	162명	22.8%	190명	22.7%
	시스템 결측값			12명	1.4%

\* 출처 : (사)통일문제연구원에서 2018년 9월과 2019년 6월에 실시한 ‘강원도 주민 인식도 조사’의 자료를 이용함.

## (2)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1차적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2018년의 46.8%에서 2019년에는 53.0%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다’와 ‘우리의 적이다’에 대한 비율도 2018년에 비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행한 일련의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lt;표 5&gt; 북한에 대한 1차적 응답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333명	46.8%	444명	53.0%
협력의 대상이다	299명	42.1%	270명	32.3%
통일의 대상이다	48명	6.8%	72명	8.6%
경계의 대상이다	9명	1.3%	24명	2.9%
도움의 대상이다	8명	1.1%	8명	1.0%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5명	0.7%	6명	0.7%
우리의 적이다	3명	0.4%	11명	1.3%
결측값	6명	0.8%	2명	0.2%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3)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에 비하여 2019년의 응답은 부정적 평가 항목인 '조금 안좋다', '아주 안좋다'가 58.1%에서 64.3%로 조금 증가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행한 일련의 도발행위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아주 좋다	9명	1.3%	6명	0.7%
조금 좋다	25명	3.5%	36명	4.3%
보통이다	257명	36.1%	255명	30.5%
조금 안좋다	186명	26.2%	239명	28.6%
아주 안좋다	227명	31.9%	299명	35.7%
결측값	7명	1.0%	2명	0.2%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4)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2018년에 비하여 2019년의 핵포기 불가능에 대한 항목인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의 비율이 47.4%에서 60.5%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행한 일련의 행동으로 볼 때, 응답자들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100% 포기할 것이다	44명	6.2%	28명	3.3%
50% 정도 가능하다	244명	34.3%	209명	25.0%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85명	40.1%	371명	44.3%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2명	7.3%	136명	16.2%
모르겠다	76명	10.7%	90명	10.8%
결측값	10명	1.4%	3명	0.4%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사실, 북한은 2019년 10월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담화를 통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10월 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지 12시간여 만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10차례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전략무기로 도발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 SLBM 시험 발사를 했다면, 미·북 비핵화 협상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날게 될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2019/10/2).

북한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도발은 그동안 자주 보여준 형태였다. 즉, 김정은이

협상시한으로 잡은 연말에 미국과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김정은의 초조함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 공격용 미사일을 10차례 발사하는 동안 안전보장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평화 경제'를 띄운 직후 북이 미사일을 쏘며 "맞을 짓말라."고 모욕했는데도 침묵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공격용이 아니라 문제없다'고 해도 침묵했다(『조선일보』, 2019/9/26). 이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7개월 만에 열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협상이 열리기 직전 이미 결렬을 예상하면서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비핵화 조건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제재 대열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얻으려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북한 내부를 알고 있는 그의 예상은 다시 한 번 적중했다(『조선일보』, 2019/10/7).

#### (5)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항목인 '아직 시기상조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가 2018년의 20.9%에서 2019년 28.5%로 증가하였다. 이것 역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응답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통일의 필요성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150명	21.2%	169명	20.2%
조금 필요하다	231명	32.6%	229명	27.4%
보통이다	180명	25.4%	200명	23.9%
아직 시기상조다	129명	18.2%	192명	22.9%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19명	2.7%	47명	5.6%
결측값	2명	100.0%	0명	0.0%
합 계	709명		837명	100.0%

#### (6)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항목인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8년의 71.0%에서 2019년 69.1%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에 답한 많은 응답자들이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98명	27.8%	223명	26.6%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307명	43.2%	356명	42.5%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82명	11.5%	128명	15.3%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24명	17.4%	130명	15.5%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7)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통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항목인 ‘불가능하다’, ‘모르겠다’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8년의 7.2%에서 2019년에는 24.3%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행한 많은 도발행위가 국민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많은 응답자들이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100% 가능하다	75명	10.5%	69명	8.2%
50% 정도 가능하다	359명	50.5%	276명	33.0%
20~30% 정도 가능하다	226명	31.8%	288명	34.4%
불가능하다	31명	4.4%	99명	11.8%
모르겠다	20명	2.8%	105명	12.5%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8)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남북통일의 실현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빠른 통일을 전망하는 항목인 ‘아주 빠를 것이다’, ‘조금 빠를 것이다’에 답한 응답자는 2018년의 35.3%에서 2019년에는 20.3%로 많이 감소하였다. 즉, 남북통일이 빠를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아주 빠를 것이다	22명	3.1%	15명	1.8%
조금 빠를 것이다	229명	32.2%	155명	18.5%
조금 늦을 것이다	291명	40.9%	392명	46.8%
아주 늦을 것이다	125명	17.6%	215명	25.7%
불가능 할 것이다	44명	6.2%	60명	7.2%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 (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에서 '한미간 협력'은 2018년 16.7%에서 2019년 21.5%로 조금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한미북간 협력'에서 2019년에 53.3%로 조금 낮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많은 응답자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2&gt;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한미간 협력	119명	16.7%	180명	21.5%
북미간 협력	59명	8.3%	99명	11.8%
한중간 협력	46명	6.5%	48명	5.7%
한일간 협력	7명	1.0%	9명	1.1%
한미일간 협력	37명	5.2%	48명	5.7%
한미북간 협력	438명	61.6%	446명	53.3%
결측값	5명	0.7%	7명	0.8%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사실, 2018년의 3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며 해빙기를 맞았던 남북 관계는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의 여파로 빠르게 경색되었다.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됐고, 대남 비난의 강도와 빈도는 높아졌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겁먹은 개"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도 쏟아졌다(『조선일보』, 2019/10/24). 이와 같이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북한과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생각마저 든다.

## (10) 정부의 최우선적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2018년의 36.8%에서 2019년에는 45.3%로 증가하였으며,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역시 조금 증가하였다. 반면에 '평화협정 체결', '남북 간 경제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3&gt; 정부의 최우선적 대북정책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2명	36.8%	376명	45.3%
평화협정 체결	166명	23.3%	168명	20.1%
남북 간 경제 협력	90명	12.7%	80명	9.6%
북한의 개혁·개방	128명	18.0%	128명	15.3%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3명	6.0%	67명	8.0%
기타	20명	2.8%	13명	1.6%
결측값	2명	0.3%	2명	0.2%
합 계	711명	100.0%	837명	100.0%

그러나 북한은 10월 23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을 폐기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10월 25일 오전 통일부 앞으로 보내왔다(「조선일보」, 2019/10/25). 지난 2010년 초,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같은 해 4월말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해 몰수 및 동결 조치를 내렸다. 당시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내 시설 투자액은 민간 기업 투자액 3,593억 5천만 원, 남한 정부 투자액 598억 6천만 원 등 4,192억 1천만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에 대해 몰수 및 동결 조치로 1.8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연합뉴스」, 2010/4/28). 현대아산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대아산이 소유한 북한 소재 유형 자산 규모는 566억 원에 이른다.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옥류관 등은 현대아산이 건설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현대아산이 북한에 투자한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금강산 일대 토지임대, 개발사업권 명목으로 4억8,000만 달러(한화 5,400억 원), 시설에 2,26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2019/10/23).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한 금강산 관광지구는 이제 물거품이 될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현실성이 없음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불이행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1)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과 북한이 조금 높아진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근 우리 정부가 행한 일련의 대북관련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은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중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자들은 인식하였다.

<표 15>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1순위 빈도

	2018년		2019년	
	인 원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한국	470	66.1	511	61.1
미국	50	7.0	81	9.7
북한	154	21.7	212	25.3
중국	3	.4	4	0.5
일본	4	.6	2	0.2
러시아	1	.1		0.0
국제사회	8	1.1	8	1.0
시민단체	1	.1	2	0.2
한국 국민 개개인	7	1.0	9	1.1
결측값	13	1.8	8	1.0
합 계	711	100.0	837	100.0

그리고 북미간 핵 담판에 러시아가 새로운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그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여, 4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과 만나 결속을 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중 외교에 전념하여 러시아는 북한 외교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이후 북미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전통 우방인 러시아의 손을 잡은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체제안 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점진적 접근론을 거론하며 북한에 힘을 실었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에 자신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다”며, 북미 핵 협상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강진욱, 2019).

이와 같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국에 도움을 주는 우군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3차례, 시진핑 주석과 4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정책을 보였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였다.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까이 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두어 앞으로의 국제 균형에서 북한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세부적인 비핵화 계획으로 그들의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고, 이에 상응해 미국 역시 큰 결단을 내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의하여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 버렸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김정은은 핵 보유의 꿈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미의 모든 안보 전략은 이 명백한 현실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 북과 협상을 계속하되 유일한 지렛대인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책도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사)통일문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와 남북한 문제에서 해결하여야 할 필연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난 1년간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① 북핵 문제 : 북한의 전면 비핵화를 유도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노력한다.
- ② 남북경협 문제 :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통하여 남북한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발전적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
- ③ 북한 인권 및 이산가족 문제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 참고문헌

- 강영두·지성림. (2018). “남북 정상회담 최대 관건은 북한 '비핵화' 의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2018권3호, pp.26-27.
- 강진욱. (2019). “북미 핵 담판 결렬… 영변+α 점점 불발.”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2019권 3월호.
- (2019).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 실행하면 불가침 선언.’”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2019권 8월호.
- 송수경. (2019). “미국 제재에 북한 '벼랑 끝 전술'.”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통권 182호 (2019년 4월), pp.18-19.
- 고유환. (2018). “2018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평화 프로세스.” 한국정치평론학회 『정치와 평론』 22권, pp.125-141.
- , (2019). “툭다운 양자협상 한계 드러낸 2차 북미 정상회담, 창의적 평화비핵 프로세스 이행 로드맵 만들어야.” 서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 통권 제97호 (2019년 3/4월), pp.14-17
- 권율·김미림. (2018).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018권 24호, pp.1-19.
- 김명호. (2018).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도 분석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원 『통일연구』, 창간호, 1-20.
- 노기호.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18권2호, pp.333-356, 2018.
- 박경준. (2019). “정부, 북한 막말 속 북미 대화 동력 살리기.”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2019년 9월호.
- 박광득. (2018).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제18권 제3호, pp.9-40
- (2018). “북미 정상회담이 남긴 딜레마와 과제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6권3호, pp.49-68.
- 양문수. (2018).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3월, pp.69-71.
- 우정엽. “북미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8년 6월), pp.27-46.
- 이용화·이해정. (2018).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추진방향.” 현대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2018권10호, pp.1-12.」
- 이정진·박경준. (2018). “한반도 비핵화 실천 선언 : 김정은 답방… 서울서 4차 남북 정상회담.”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마이더스』, 2018권10호, pp.28-29.
- 임수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향후 전망.”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제21권 제3호, 2019년 3월, pp.72-75.
- 정창현. “문재인 정부, 남북·한미정상회담 통해 북미 간 대화 연속성 마련해야,” 서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 통권 제97호 (2019년 3/4월), pp.18-21
- 『데일리한국』. (2019). 북한,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 맞아 "파탄 책임은 미국." (6월 12일).

- 「연합뉴스」. (2010). “北, 현대아산 소유 금강산 부동산 동결.” (4월 28일).
- 「조선일보」. (2019). “美와 협상 발표 12시간만에 SLBM 쏜 北...비핵화 협상판 바꿀 게임체인저 되나.” (10월 2일).
- 「조선일보」. (2019). [사설] 金 “對南 경고 미사일” 공언해도 文 “北 단 한 건 위반 안 해.” (9월 26일).
- 「조선일보」. (2019). “[사설] '김정은 핵 포기 뜻 없다'는 명백한 사실 직시해야 한다.” (10월 7일).
- 「조선일보」. (2019). “北 '금강산 시설 철거 논의' 통지문 보내와.” (10월 25일).
- 「조선일보」. (2019). “북한에 올인한 文대통령, 내세우던 '핵심 정책'까지 무너지나.” (10월 24일).
- 「조선일보」. (2019). “호텔, 면회소, 온천장, 면세점 ...北, 금강산 내 南시설 10년간 멋대로 사용하더니.” (10월 23일).
- 「조선일보」. (2019). 北, 이달만 벌써 5번째 미사일 발사...靑 “긴장 고조 행동 중단하라.” (8월 24일).
- 「조선일보」. (2019). 우리 정부 “北, 위반 없었다”는데...北매체 “南, 평양선언 위반” (9월 29일).
- 문재인. (2019).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http://news.zum.com/articles/55195572>.  
(검색일 : 2016. 10. 1).